

버스노동자투쟁 지지! 버스문제 해결 촉구!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대책위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3월 14일 오전 11시

○ 장소 : 전주시청 앞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대책위

녹색연합, 다함께, 민생경제연구소, 통합진보당전북도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여성노조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시민회, 진보신당전북도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 익산, 군산), 여성농민회전북연합회, 생명평화전북기독교인연대,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전북예수살기(준)

〈기자회견문〉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버스회사와 지자체는 버스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

146일의 시내버스 파업 이후 약 1년 만에 또다시 노동자들이 운전대를 놓고 거리로 나왔다. 버스 회사의 노동자 탄압과 단체교섭 체결 회피, 전주시의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쌓여가던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만이 고조되며 우려됐던 2차 버스노동자 투쟁이 결국 시작된 것이다. 버스파업 해결을 위한 전북 시민단체 대책위는 이번 사태를 불러오게 한 버스회사와 전주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2차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이들과 연대하는 460일 넘게 투쟁하고 있는 전북고속 노동자들에게도 지지를 보낸다.

지난 기간 버스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인 단체교섭 체결을 회피하며 노동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올해 2월까지 12차 교섭이 진행됐지만 사측은 시종일관 버티기로 일관했고, 버스노동자들은 교섭 체결을 위해 수정된 교섭안을 두 차례나 제시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단체교섭 체결을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노동자들이 교섭결렬을 선언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011년 버스 파업이 종료되며 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민주노조 인정과 단체교섭 체결 이행만을 약속받으며 현장에 복귀했지만 사측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전북고속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수십 차례의 노사교섭에서 노동자들이 노조 인정 등 기본적 요구만을 가지고 협상을 했음에도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들 버스 회사 사주들은 노동자들을 탄압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 회사는 현금 수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투명한 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현금인식 요금함 도입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전주시의 전체예산이 1.67배 인상된 것에 비해 버스보조금은 무려 3.7배 인상되었지만, 회사의 회계자료를 통해서는 막대한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고속의 경우는 행정기관에 신고한 197개의 버스노선 중 112개의 노선만이 실제 운행이 되어, 버스보조금을 챙기기 위한 비열한 행태를 저질렀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촉발시킨 책임은 전주시와 전북도에도 있다. 거액의 세금이 버스회사로 지급되고 있음에도 시청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외면해 왔다. 버스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무를 통해 간신히 150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주시가 사측의 허위 자료에만 의존하여 평균 26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은 나태하고 무능력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전북도 역시 사측의 거짓과 기만적인 자료만으로 보조금 관련 의혹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다. 자신들이 허위 노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사측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결국 2011년 말 전북 고속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버스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현금인식기 도입에서도 생색내기 행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전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이번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체버스와 대체인력 투입부터 준비해왔다. 시민의 편리한 서비스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내팽개친 버스회사와 전주시, 전북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시민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버스회사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한 교섭을 통해 단체교섭 체결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주시와 전북도 역시 대체버스와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사측에 성실한 노사협상을 요구해야 하며, 산적한 버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버스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며, 이번 투쟁을 통해 버스가 진정 시민의 발로 자리할 때까지 함께 연대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2년 3월 14일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버스파업 해결 전북 시민단체 대책위의 요구사항

1. 시내버스 노사 단체협상 체결 및 전북고속 파업 즉각 해결하라!

12차례의 교섭에도 버스노사 단체협상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버스회사의 책임이다. 노동자들이 2차례의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회사는 현재의 한국노총 단체협상안보다 후퇴된 요구안을 내걸었다. 버스사업주들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여 단체협상을 체결해야 하며 전주시 또한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450일이 넘게 투쟁중인 전북고속에 대해서 전북도는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파업해결을 위해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

2.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를 해산하라!

버스회사 대표와 관리자들로 구성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하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배분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버스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버스운영을 가로막는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해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직접 지급·관리해야 하며, 전주시의회의 버스특위의 권고대로 버스 배차 및 노선에 대한 조정을 위해 노동자·시민·회사·지자체가 참가하는 '시내버스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3. 현금인식기를 전면 도입하라!

버스 보조금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버스회사의 현금 수입내역이다. 그러나 지난 파업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현금수입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연간 4억 원을 들여 현금인식기를 대여해 시내버스 100여대에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수박겉핥기식의 대응이다. 일부 버스에만 현금인식기를 설치할 경우 버스회사는 이를 악용하여, 현금인식기가 설치된 버스를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에 배치하여 현금 수입에 대한 결과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금인식기 전면 도입을 위한 예산은 16억 원 정도인데 이는 4년간의 대여 및 유지비용과 같은 수준이다. 전주시는 현금인식기를 전면 도입하여 버스보조금의 투명성 확보해야 할 것이다.

4. 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약속 이행 상황을 점검하라!

전주시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요금 인상분에 대한 관리 감독, 버스에 대한 경영합리화, 재정지원금 개선 등을 약속했다. 전주시와 전북도는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